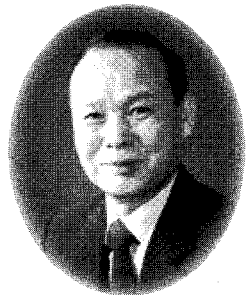




신유형 건설수요 창출로 건설경기 활성화 적극 추진

투명한 경영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각종 부패와 부실의
온상이란 이미지에서 탈피하여야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전설업계가 최악의 불황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곧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 침체가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켜 국민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 및 민간의 SOC 투자확대 등 공급물량 증대와 함께 친환경사업 개발 등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건설교통부

강동석 장관은 지난 6월 18일 대한전문건설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건설경기의 침체는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켜 국민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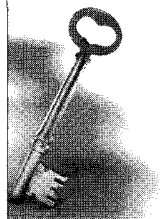
또 강동석 장관은 「SOC 투자확대를 위해 민자유치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산하공사의 ABS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도 확보하겠다」면서 「주택건설 지원을 위해서는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환경친화사업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육성에 관한 정부의 장기 비전에 대해서, 강동석 장관은 「건설산업은 그 동안 도로·항만·공항 등 SOC 구축과 해외건설시장 개척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을 담당해왔으나 기술경쟁력 약화와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로 낙후산업으로 인식되어 안타깝다」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건설산업의 장기발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강동석 장관은 「건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찰제도를 비롯한 건설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건설기능인력과 건설자재 등 생산요소의 안정적 확충 방안도 마련하고,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신시장 개척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부실과 부조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낙후산업의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첨단종합산업으로 제 위상을 찾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강동석 장관은 「정부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실태점검과 건설산업 정보망을 통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업계도 투명한 경영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각종 부패와 부실의 온상이란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강동석 장관은 「건설업이 단순시공에서 벗어나 하이테크의 건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이를 위하여 발주자는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최소 수준의 기술을 구입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기업은 기술개발과 고급 엔지니어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신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신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 개최 등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



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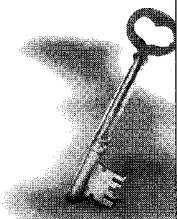
그 동안 건설교통부에서 건전한 건설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색출과 부실업체 퇴출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강동석 장관은 「건전한 건설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2000년부터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그간 2만여 개의 부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등 제재처분을 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01년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kiscon.net)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1억 이상 공사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현장기술자 허위·이중배치 등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부조리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강동석 장관은 「현재 불법하도급, 기술자 이중배치 등 각종 위법행위를 종합정보망에서 자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각 협회의 시공능력정보망과의 연계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강동석 장관은 「건설교통부는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4대 보험 가입비용을 도급계약체결시 공사원가에 반영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반영비용을 현실화시키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노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건설업계의 일용직 관리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라 50%대의 저가낙찰이 속출하고 있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 강동석 장관은 「낙찰자가 운에 의해 좌우되는 적격심사제의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필요하나 업체들 간의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덤핑입찰의 부작용이 확대되어 건전한 건설업체마저 피해를 보는 한편, 부실시공과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증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덤핑입찰 여부를 판정하는 저가심의기준을 강화할 계획으로, 현행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강동석 장관은 「건설업체의 신용도와 공사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보증서를 발급토록 하고, 보증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



와 함께 감리·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적절한 품질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일반·전문건설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공사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건설업계의 지적에 대하여, 강동석 장관은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는 전체공사의 계획·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공종별 시공을 전담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지난 98년 4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공사에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전문업계에서는 저가하도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일반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여 일반·전문간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가 공공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등 생산체계 개편과 연관된 문제가므로 종합적인 맥락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으로 건설업계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 주 5일제가 어떤 방향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강동석 장관은 「7월부터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동절기·우기시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과 다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건설현장은 장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젊은층이 진입을 기피하여 기능인력 수급에 애로가 많다」면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건설현장에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건설교통부는 5개 지방청과 도공·주공 발주공사 중 각 1개 현장을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일요일휴무 시범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실시 대상 공사현장은 기존에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5개 현장과 새로 발주할 2개 현장이며 앞으로 시범실시 성과를 보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끝으로 강동석 장관은 「앞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능력 있는 업체가 수주를 많이 하고 발전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업계 스스로도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요행에 의한 낙찰만을 기대하며 덤핑입찰을 시도할 경우 건설산업의 발전여지는 사라짐으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활동의 주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